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분석해보니

충청에 몰리고 호남으로 안온다

정부의 비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호남권 등으로의 기업 이전은 미미하고, 충청권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수도권 외연만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부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거리 및 낙후성을 감안한 금융·세제지원의 차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호성(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재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참여정부의 비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사육이나 공장을 옮기고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받은기업 99%가 충청형

‘지역균형 발전정책’ 특정지역 편중 역효과 초래

났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먼 호남과 영남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와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대부분 충청권 이전 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이전 기업이 전체 혜택금액의 99.1%인 434억원에 받았다. 반면 호남과 영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받은 혜택은 전체의 0.9%인 4억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63조2항(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혜택도 대부분 충청권 이전 기업이 누렸다. 충청권으로 사육과 공장을 옮긴 기업이 전체의 82.7%인 728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 대출 지원도 충청권으로 이전한 기업에 쏠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8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대출승인된 6천 301억원 중 72.1%인 4천546억원이 충청권 이전기업에 몰렸다.

그러나 광주, 전남·북 등 호남지역은 2.4%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경북(2.8%), 강원(22.7%)지역 이전기업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특히 부산·경남·울산지역으로 이전해 대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무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부른 셈이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실행정수도건설 대선공약 여파와 제도 미비로 인해 특정지역만 살찌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금융·세제지원 비율을 이전 거리 및 이전지역 낙후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땅위를 달리는 F1 경주차’ 전남도청에 전시... 땅위를 달리는 하이테크 전투기 F1경주차가 전남도청 1층 로비에 전시됐다. 르노 F1팀이 실제에서 사용한 이 차량은 최고 출력 780마력, 최고 속도 355km에 추정 가격만 100억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200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7월말 F1경주장 공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010년 영암에서 한국 최초의 F1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도청 제공>

광주·전남 수출 크게 감소 국제선 항공료 오른다

9월중 무역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광주본부세관이 ‘2007년 9월중 무역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출액은 7억3천300만달러, 18억9천300만달러로 전월보다 각각 8.5%, 12.9% 줄었다.

이는 올 추석 연휴일수가 길어 각 수출업체의 작업일수가 단축된데다 기아차와 엠코테크놀로지 등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수출비중 27.4%)와 반도체(19.3%)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2억100만달러), 반도체(1억4천만달러), 타이어(6천200만달러), 병장고(8천300만달러) 등이었다.

전남은 석유제품(4억3천300만달러), 유기 및 무기화합물(3억1천400만달러), 철강관(2억4천만달러), 인조플라스틱 및 제품(2억6천600만달러)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광주의 9월중 무역수지는 4억2천7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03년 4월 이후 5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남은 7억6천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정부 유가급등 따라

유류 할증료제 개편

정부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늦어도 연말까지 국내 항공사의 화물 및 여객운임을 올릴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최근 항공사들이 유가가 너무 올라 운영압박이 심하다면서 기존 유류할증료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현재 유가상승이 심상치 않아 유류할증료 제도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연내까지는 고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객 유류할증료의 경우 기존 1~7단계로 구성됐는데,

3~4단계 정도 높여 10단계 정도까지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우선 화물 유류할증료부터 시작해 여객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2005년 11월부터 여객 유류할증료의 경우 꺾임당 1.8달러가 넘으면 최고 단계인 7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유가가 연초 예상 수준인 배럴당 60~70달러를 넘어 90달러대에 진입함에 따라 막대한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며 외국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의 유류할증료 적용을 정부측에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중기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최근 지방청 2층 강당에서 연구기관, 각 대학센터, 4년제 대학교 및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연구장비 공동이용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TP 티타늄센터, 동신

대학교 등이 연구장비 공동이용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구기관장 정교교와 함께 지역연구장비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중소기업들이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연구개발(R&D)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

음식점 ‘한우’ 34%가 가짜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결과 젓소가 많아

음식점에서 ‘한우’로 판매되는 쇠고기 중 30%는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 실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우판매 음식점 51곳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34%가 한우형이 아닌 것으로 판별됐다.

식약청이 지난 2005년 서울지역 한우판매 음식점 51곳에서 한우로 표시된 쇠고기 150건에 대해 모색 유전자(MC1R) 검사를 PCR-

RFLP법으로 실시한 결과 34%인 51건이 한우형이 아닌 젓소형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서울·경기·부산·대전·대구 등의 한우판매업소 125곳에서 한우표기 검체 279건을 분석한 결과 84건(30.1%)이 한우형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식약청 조사에서 사용한 실험방법은 농림부에서 개발한 털색깔 유전자(MC1R)를 이용한 한우판별법으로, 젓소와 구분은 가능하지만 수입육에 대한 판별이 불가능해 식약청이 원산지 표시위반을 이유로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고 장 의

원은 설명했다.

이날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청의 쇠고기 원산지 단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 1월 사업시행 이후 단속요원 대상을 교육용을 단 1회만 시행했으며 교육참여율도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7천246곳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09개소에 그쳤다.

김병호 의원은 “쇠고기 원산지 단속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허위 표시보다는 미표시에 치우쳐 있는 데 이는 단속요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세 고액체납자 출국관리 ‘허술’

해외여행비용 일반의 73%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요청 실적이 매년 5% 미만이고 고액 체납자들이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등 정부의 국세체납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2년 이후 5천만원 이

상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 및 여러발급 제한 요청 비율은 2002년 0.7%, 2003년 2.9%, 2004년 5.6%, 2005년 3.5%, 2006년 2.7%, 올해 6월 3.8% 등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4년을 제외하면 모두 5% 미만이고 지난 6년간 평균은 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국세체납자의 출국여부가 통계화 돼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시차를 두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법절조회만 시행하고 있다”며 “국세체납자의 출입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구멍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평균 해외여행비용은 15.5%로 같은 기간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 비용 21.1%의 73.3%에 달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2004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비용이 27.2%로, 일반 국민의 18.4%보다 1.5배나 높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겁다고 뭐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약,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928-0200]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